

ISSUE & FOCUS

Newsletter 2017-4(4)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통일·대북정책 분야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한 북한정상화가 되어야

사실 어떤 상태가 '정상적'인가는 개인, 단체, 국가 등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 환경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가치기준의 준거점은 보편타당성이 있을 때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비정상적 상태가 유지된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상적 상태로 회귀된 것도 역사적 경험이다. 역사발전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신장, 인권향상, 선택의 자유, 법의 지배 등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바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제도와 관행, 정책수단 등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상태로 전환시켜 개인의 자유와 복리 증진과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정상화(Normalization)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 기세등등했던 군국주의,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괴리된

비정상적 체제였기 때문이며 사회주의체제 70년의 실험이 무위로 끝난 것도 사회주의 체제의 비정상성 때문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아직도 비정상적 상태를 연속해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17세기 후반 이성과 과학에 기반 한 계몽사조는 산업혁명과 도시화, 민주화라는 ‘근대(Modernity)’의 거대한 변화를 촉발했다. 이런 근대의 정신이 과학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화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산업화가 이성과 결합하면서 1인 지배의 전통적 통치구조를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화로 구축했다. 결국 근대화란 전통사회에서 인간 활동을 억압·제약·규제한 비합리적 정치사회관계를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자유공간을 신장시키는 것이 민주화의 과정이라면,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이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성의 놀라운 향상을 가져와 인간 물질적 삶의 질을 고양시킨 것이 산업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민주화는 ‘각종 차별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과정이며, 산업화는 ‘결핍(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민주화’와 ‘산업화’는 인간의 자유 신장과 물질적 발전을 향상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적·당위적 가치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북한정상화는 북한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근대국가의 모습으로 변모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스스로 근대국가로의 전변을 거부하고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주체사상에 의한 3대 세습이 정당화되고 있다. 3대 세습이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계승했지만 권력이 오로지 김씨 일가에게만 세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가대리(一家代理)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애초에 권력교체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주민을 위한 포용적 경제제도보다는 소수 엘리트층을 위한 착취적 경제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즉 1957년 11월 김일성이 ‘쌀밥, 고깃국, 비단옷, 기와집’의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 이후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궁전과 치적에 자원을 낭비했기에 착취 경제제도임이 분명하다. 착취적 경제제도는 김씨 일가와 그 주변세력들을 위한 경제제도라는 점에서 비산업화적이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反)역사적이고 퇴보(退步)적 현상이다.

올바른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주민들 인식 변화

이제 우리는 북한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북한주민들이 사상해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이 3대 세습과 철권통치를 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에서 ‘주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내용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외부상황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되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북한의 모든 부문을 규제하는 상황이 고착되고, 주체사상이 경제의 정치화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북한 경제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

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낡은 이념이며 사라져야 할 사상이다. 따라서 낡은 주체사상에 억눌린 북한주민들이 진보적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눈을 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북한주민이 더 많은 외부정보가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바른 정보를 유입해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통일기반의 ‘정신적 자산’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계층별, 지역별, 세대별로 맞춤형 정보를 개발하여 유입시키고 남북한 방송통신의 표준화, KBS한민족방송의 통일방송으로 기능전환, 남북한방송동시개방 및 TV 수상기 지원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국제규범의 준수에 따른 개혁과 개방

다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강제하는 것이다. 개혁이란 제도나 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성이나 비효율성을 제거해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혁은 열성(劣性)의 체제(제도)를 우성(優性)의 체제로 바꾼다는 점에서 국제규범을 준용하는 것이다. 개방은 경제특구를 통해 외국자본을 유치해 소기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만 투자자의 입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경쟁성 자율성과 같은 속성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방도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혁과 개방은 국제규범의 준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는 북핵 자금과 통치 자금의 조달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북한전체주의체제를 더 공고화할 수 있기에 재고되어야 한다.

북한의 사상해방과 개혁개방은 한반도통일(Unification)의 첫 단추이다. 그 첫 단추는 우성(優性)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기반 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을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 하의 전체주의.사회주의’는 자연도태 대상이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역사적 진화.발전이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필연을 외면하고 체제와 가치를 혼합하는 통일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